

## 부록1. 서울사회협약서(안)

### 시민의 정부로 향해가는 서울사회협약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40가지 협치의 약속-

#### □ 협약의 비전

시민사회와 서울시 우리 모두는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숙의·협력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제약요인을 해소하고(걸림돌을 제거하고) 건설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실천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의 정부를 실현한다

#### □ 협약의 목표

1. 서울시-시민사회-지역사회간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 확립
2. 공공정책의 품질 향상과 이를 위한 협력적 정책공동생산체계 구축
3.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향한 분권적 자치 실현

#### □ 협약목표 실현을 위한 협약의제 설정: 5+3 협약의제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
2. 정책참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
3. 협치친화적 행정으로의 제도혁신
  - 3-1. 신뢰와 협력의 민간위탁제도
  - 3-2. 신뢰와 자율의 민간보조사업 제도
  - 3-3. 개방과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혁신
4.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지역사회
5. 정책의 공동생산을 향한 시민숙의

## □ 협약의제별 실천과제(안) : 시민의 정부로 가는 40가지 약속

###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

- 1-1.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의 동반자이자 정책의 공동생산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행정과 시민사회 모두 시민사회가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시민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1-2. 시민사회와 행정은 서울시정 전반에 사회적가치를 확립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가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1.3. 서울시는 시민사회가 정책의 현장에서 내재하는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사회의 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효성있고 시의적절한 해법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며,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모색한다
- 1.4. 시민사회와 행정은 사회적 기여가 큰 각종 공익활동들이 촉진되고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공익활동가들을 적극 발굴하고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공익활동가들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들(교육·훈련, 보조·지원 등)을 이행한다
- 1.5. 행정은 공익활동의 촉진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자립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기금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한다
- 1.6. 행정은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정책의 공동생산에 적극 관여하는 과정에 시민사회 내부의 연대와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지원들을 제공하도록 하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협력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의제를 개발하는 정책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1.7. 시민사회와 행정은 공익활동가와 그(그녀)의 활동이 사회발전의 원천이자 민주적시정의 잠재적·현시적 자원임을 인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적 인정(경력 인정 등)과 함께, 적절한 보상체계(보수, 수당 등)를 확립하는 방안을 이행한다

## 2. 정책참여에 따른 사회적책임성 제고

- 2.1. 행정과 시민사회는 공익의 실현 주체이자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법률로 규정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더 수준 높은 도덕적 책임과 집단적 책임(또는 연대 책임)을 이행하고, 윤리 경영·인권경영을 확립·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2.2. 시민사회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정책(사업)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제한된 자원 하에서도 최대한의 금전적·비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 2.3. 시정 운영에 대해 행정과 공동의 사회적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는 행정과 함께 시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절차나 제도를 확립하며, 그 일환으로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 등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주체들은 개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행방안도 마련하도록 한다
- 2.4. 사회적책임을 달하려는 우리 시민사회는 정책에 참여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노동안정성 보장과 근로여건 보호를 경영에서 우선적 요소로 고려하며, 행정은 이 과정에서 일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5. 행정과 시민사회는 모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금전적·비금전적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며, 예기치 않게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민간협의회 등) 책임을 지는 등의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2.6. 행정과 시민사회는 공적·사회적 책임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언·약속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 투명성선언’을 마련, 실행한다

### 3. 협치친화적 행정으로의 제도혁신

#### 3.1. 신뢰와 협력의 민간위탁제

- 3.1.1.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시민사회가 사무를 수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책임을 가지는 동반자 관계에 입각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바람직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3.1.2. 위탁기관(서울시 및 산하기관)은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자기책임성에 입각해 자율적, 창의적으로 위탁사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경영자율성 협약’을 체결, 이행하도록 한다
- 3.1.3. 아울러 수탁기관이 자립적 기반과 자기주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다
- 3.1.4.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게 불합리하거나 위탁기관의 편익에 의한 절차나 기준을 일방적·자의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호 인정할만한 불합리한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즉각 해결조치를 모색한다
- 3.1.5.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는 데 민간위탁 평가제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운영성과와 협치역량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조속히 마련, 이행하도록 한다

- 3.1.6. 위탁기관(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청)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절차상의 불공정이나 특혜가 초래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와 처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 3.1.7. 민간위탁 제도에서도 사회적가치를 지향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행정은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가치 기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 이행하도록 한다
- 3.2. 신뢰와 자율의 민간보조사업 제도
- 3.2.1.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주체들을 보조·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이 과정에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도록 한다
- 3.2.2.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행하며, 그 일환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비하도록 한다
- 3.2.3. 민간보고사업 제도에서도 다년도 사업과 다자간 협력사업을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에서 자율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예산운용(예산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민간 주체의 자율성을 개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하도록 한다
- 3.2.4. 민간보조사업 주체의 선정 절차와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도 민간 주체의 창의와 자율을 촉진하고, 성과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3.2.5. 민간보조사업 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 민간주체의 자율과 책임성에 기초해 운영되는 제도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성과보상 기반의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 이행하도록 한다

### 3.3. 개방과 참여를 촉진하는 시정혁신

3.3.1. 행정과 시민사회는 '시민의 정부 실현'이라는 시정의 기치 아래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배양·확산되도록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공 정보의 개방과 환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3.3.2.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 아래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시민사회 당사자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숙의를 극대화하고 재정운용 절차를 민주화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3.3.3. 행정과 시민사회 양자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재정적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이른바 칸막이 행정)를 해소하고, 정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3.4. 행정과 시민사회는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성과와 효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성과와 협치역량, 사회적가치 지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조속히 마련·이행하도록 한다

3.3.5. 서울시정 내 각종 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가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원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당사자 주도의 거버넌스형 위원회의 설치·운영도 활성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이행하도록 한다

#### 4.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지역사회

- 4.1. 사회협약의 주체인 우리 모두는(혹은 시민사회와 행정은)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 4.2. 시정과 지역사회는 지속가능한 서울시 발전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에 기초해 지역사회 기반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 및 협력의 절차를 제도화하며,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향적 정책기획 절차도 실시하도록 한다
- 4.3. 협치기반(또는 협치친화형)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재정 분권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 주도와 숙의·공론의 절차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분권예산 제도를 적극 도입·실시한다
- 4.4. 사회협약의 주체인 우리 모두는(또는 시민사회와 행정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혁신적 공익활동가를 적극 발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모색한다
- 4.5. 서울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치를 선도하는 조직들(협치회의, 주민자치회, 주민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이에 상응하여 해당 조직은 그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다원화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절차를 확립하도록 한다
- 4.6. 사회협약의 주체인 우리 모두는(또는 시민사회와 행정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구한다

## 5. 정책의 공동생산을 위한 시민숙의

- 5.1. 행정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다양한 사회의제나 현안을 발굴하고, 일반시민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론·숙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확립하며, 시민사회는 이러한 공론·숙의 과정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촉진자·지원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5.2.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된 조건이 지역사회라는 인식 아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을 모색하는 공론장이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이행하도록 한다
- 5.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숙의나 정책당사자 주도의 정책숙의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적 숙의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의 개방성과 정보의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숙의·공론의 결과가 정책과 적극 연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확립하도록 한다
- 5.4. 서울시민(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서울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 공적숙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과 수준의 사회적 인증과 보상체계(참여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기준으로 확립하도록 한다



---

## 부록2. 영국 협치협약(Compact, 2010)

# 협약서



잉글랜드 지역사회 및 시민의 혜택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연립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협약서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며, 협약의 소리(Compact Voice)와의 파트너십으로 제작

### 총리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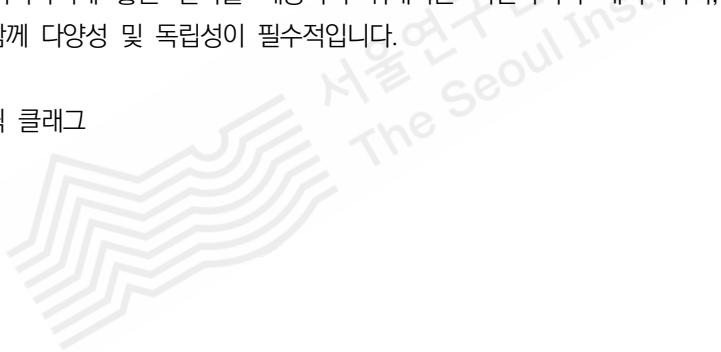
본 협약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혜택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큰 사회(Big Society)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며,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량, 열정, 헌신이 잘 발휘되는 곳에서만 지역사회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 부총리의 글

연립정부가 전념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번영해야 합니다. 본 협약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권력 이동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과 지역사회에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개혁적이며, 온정적인 기조와 함께 다양성 및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부총리 닉 클래그



## 시민사회부 장관의 서문

새로워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본 협약서는 시민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큰 사회(Big Society)의 핵심이며, 연립정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큰 사회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시민사회를 특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사회 형성 및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립한 개혁안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가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적기업과 협업하는 방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 협약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본 협약은 간결하며, 결과 및 실질적인 약속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협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본 협약서가 파트너십이 잘 이행되게끔 하는 보다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립정부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적기업과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해당 단체 및 기업과 의미 있는 관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때는 바로 파트너십이 정부 부처 및 기관에게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더이상 협약서가 필요치 않게 될 때일 것입니다. 협약서가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협약서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mpact)와 Compact Voice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총리께서는 협약서가 진정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고, 그에 따라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런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 협약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관계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장관 닉 허드

## 사이먼 블레이크의 서문

이제 체결 12년 차에 접어드는 본 협약은 정책 변화의 속도를 볼 때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협약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영향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어려운 때 우리는 협약을 새롭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성격의 급격한 변화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삭감이 지금이 정부와 시민사회에 중요한 시기임을 보여주며,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의 관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관계 기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협약을 사용하여 관계를 변모시켜왔고, 그 결과 지역 사회 및 공공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웹사이트에서는 협약서에 따라 비용 삭감 관리부터 결과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현상이 변화한 수많은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사회 영역은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며, 본 국가 협약서는 지역 협약서의 기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본 협약서와 함께 발표된 책임성 및 투명성 조치를 도입한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은 본 협약서가 전국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협약을 활용한 업무가 자연스러워진 많은 곳에서는 책임성과 투명성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활기차고 견고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더 남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해당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자 간 관계의 증진을 위해 협약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협약을 활용한 곳에서는 협약서가 단지 준수해야 할 또 다른 문서 중 하나가 아니라 협약을 활용하는 영역이 기존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 방식 중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또한 양자가 문서를 넘어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최고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시기에, 이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합시다.

사이먼 블레이크

Compact Voice 의장

## 협약서

새로워진 본 협약서는 잉글랜드의 연립정부와 비정부 공공기관, 제 3의 기관 및 감독 기관과 시민사회단체(CSOs)<sup>34)</sup>간의 합의문이다. 본 합의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 영국의 지역사회 및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연립 정부

큰 사회(Big Society)라는 연립정부 비전의 중심에는 공공서비스의 개혁, 그리고 국가의 통제와 하향식 정부 목표 설정 방식보다 사회적 활동을 우선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권력과 자신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는 동인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중앙의 권력을 이동시키고,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역량을 구축시키면서 이런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운동을 펼치며, 공공서비스 고안 및 제공 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권한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비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 시민 사회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의 소규모 단체부터 대규모 국제 조직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모든 조직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목표 및 목적을 위해 헌신하며, 많은 조직들이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아도 공공기관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지니는 가치와 생산적인 파트너십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은 인지하고 있다.

## 건강한 파트너십

본 협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 및 약속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생산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

지역에는 본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이런 원칙은 지역사회가 힘을 얻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문서와 함께, 책임 있고, 투명하게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본 협약서는 영국 정부와 잉글랜드 시민사회단체 간의 합의문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즈의 시민사회단체와 상호작용을 맺거나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자금 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서에 제시된 시민사회

<sup>34)</sup> 시민사회라는 용어에 대한 이론이 있는 가운데, 본 협약서의 목적에 따라 여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자선단체, 사회적기업,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체 관련 약속을 존중하며 각 지역에 자금을 제공한다. 웨일즈 의회 정부,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 정부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각각의 위임 정부는 기존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본 협약이 그러한 합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실효성 있는 파트너십은 아래의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된다.**

1. 강력하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
2. 정책, 프로그램 및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고안 및 개발
3.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경 관리를 위한 확실한 준비
5.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1. 강력하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

### 정부의 임무:

- 1.1 재정적 관계 혹은 그 외에 존재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에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가 캠페인을 할 권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독립성 존중 및 지지
- 1.2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돕고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함
- 1.3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및 능력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돕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지원의 필요 및 개발 조직을 동원해야 하는 필요를 종합적으로 (내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1.4 시민사회단체가 기존 서비스에 도전하고, 신시장에 접근하며,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당 단체를 돕는 가운데, 데이터 및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투명성을 더욱 보장
- 1.5 국가 소유의 부동산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같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 고려
- 1.6 자원봉사자들이 형사기록국(CRB)의 조사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한 가지 이상의 명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 간소화 노력

### 시민사회단체의 임무:

- 1.7 캠페인을 하거나, 지지 활동을 할 때 대표적인 시민 및 지역사회의 구성 기반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확고한 증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1.8 재정적 또는 그 외 정부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대표 명분에 중점을 두며,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2 정책, 프로그램 및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고안 및 개발

### 정부의 임무:

- 2.1 사회적<sup>35)</sup>, 환경적 및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고안, 개발, 제공하는 표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2.2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특히 이런 개발이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
- 2.3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고안하기 위해 최초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기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
- 2.4 시민사회단체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대응을 준비할 때 서비스 사용자, 수혜자, 회원, 자원봉사자 및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한 경우 향후에 있을 협의에 대해 사전 고지. 해당되는 경우,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케 하고 단기에 부합하는 명확한 설명 및 논리와 함께 혹은 보다 비공식적인 접근 방식으로 12주짜리 공식적 서면 협의 시행
- 2.5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 및 생각이 정책, 프로그램 및 공공서비스 설계와 개발에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피드백(예를 들어, 전반적인 정부의 대응을 통해) 제공 고려
- 2.6 관료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입법 및 지침이 시민사회, 특히 소규모 단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시민사회단체의 임무:

- 2.7 해당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 추진 및 그에 대해 대응
- 2.8 정부에 건의할 때, 서비스 사용자, 고객, 수혜자, 회원, 자원봉사자 및 수탁자의 관점 따름. 어떤 역량을 가진 누가 대표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건의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 2.9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증거 기반의 해결안에 집중

<sup>35)</sup>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 및 혜택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가치를 의미한다. 즉, 개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의 다른 분야에 미치는 폭넓은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 3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정부의 임무:

- 3.1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개혁 조치에 따라 신시장을 개방하고, 기존 시장의 위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3.2 보조금, 계약, 대출 금융, 부동산의 활용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에 자금 또는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고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자금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 소규모 단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3.3 모든 기금 관련 결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며, 투명성 보장
- 3.4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돈에 합당한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몇 년 동안 자금을 조달해줄 것을 약속. 자금제공 기간은 성과를 내기까지 소요될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만약 몇 년 동안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 달성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면,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
- 3.5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과 달성에 알맞은 적용 및 입찰 절차가 잘 관리되고, 투명한 형태로 이행되도록 함<sup>36)</sup>
- 3.6 계약 또는 자금제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가치 등의 결과가 관리 감독되는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합의. 모니터링 및 보고가 기획의 성격 및 규모와 관련이 있으며, 그에 비례하도록 함.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 3.7 계약에 입찰할 때, 보고 및 모니터링에 대한 합의 포함.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처리되도록 함
- 3.8 시민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교육 및 자원봉사자 참여 관련 비용 등 적합하며, 관련 있는 간접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인지
- 3.9 위험을 관리하기에 가장 알맞은 단체와 위험을 논의하고, 그 단체에 위험 부담. 주 계약 업체가 있고, 해당 업체가 위험 부담 시 본 협약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남기와 위험이 기획의 본질 및 가치에 비례할 수 있도록 함
- 3.10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범위의 단체가 적절한 자금 및 재원조달 모델, 예를 들어 성과 기반의 지급 및 지출 전 지급과 같은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지출 전 지급은 돈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할 경우, 사례별로 고려
- 3.11 모든 관련 기관이 본 협약서 준수의 의무가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주 계약자와 협력업체 간 관계도 고려함. 자금 관련 합의 및

<sup>36)</sup> HMT 공공자금관리(HMT Managing Public Money) 및 그린북(Green Book)에 따라 이행

재정적 지원으로 어떻게 소규모의 전문 기관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지 입증

- 3.12 유럽의 자금을 배분할 때 본 협약서 적용, 유럽의 규제와 상충하는 경우,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해결안에 대해 합의
- 3.1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의 실효성과 파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목적 달성을 해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 권장. 이런 피드백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룰 것 고려

#### 시민사회단체의 임무:

- 3.14 자금 활용 전 자금제공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성과 달성 방식을 분명히 할 것
- 3.15 협치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하여, 관련 단체가 자금 제공자에게 중요한 상황 변화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조달 모델과 관련 있는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3.16 내부 혹은 외부에 상관없이 모니터링이 좋은 관리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보고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
- 3.17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사회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가치 입증
- 3.18 보다 나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지역사회가 정부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3.19 시민사회단체가 대중들에게 정부의 자금제공을 알릴 것이라는 기대를 정부가 하는 것은 타당함을 인지

####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경 관리를 위한 확실한 준비

##### 정부의 임무:

- 4.1 만약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정적 관계를 종결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과 향상 조치 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합의
- 4.2 자금을 감축하거나 자금제공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혜자, 서비스 사용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동일한 집단을 위해 일하는 또 다른 조직에게 자금을 재할당 해야하는 필요 평가
- 4.3 미래의 자원에 대한 제약 또는 변화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고, 관련 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야별 전문성에 따른 대응을 모두 고려
- 4.4 자금제공 관계 또는 기타 지원에 대해 변경 또는 해당 관계를 종결시킬 때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고지. 결정이 내려진 분명한 이유 제공

##### 시민사회단체의 임무:

- 4.5 수혜자 및 해당 단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금제공 종료에 대한 계획 수립
- 4.6 프로그램 및 자금제공에 대한 검토 시 긍정적으로 기여
- 4.7 자금제공의 변경이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영향 및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에 자문

## 5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정부의 임무:

- 5.1 특히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대변 및 지원하거나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서비스 사용자 및 고객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욕구 이해.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고안 및 구현할 때 영향력 평가 등을 하며 사용자 및 고객의 생각을 고려
- 5.2 특정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그리고 지역사회의 응집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들이 국가 자금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함을 인지
- 5.3 불법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시키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 이행

### 시민사회단체의 임무:

- 5.4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을 경우,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어떻게 해당 기관이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입증
- 5.5 불법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보다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입찰 등의 실질적인 조치 수행

### 부록 3. 서울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     |   |
|-----|---|
| SQ1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 SQ2 | 귀하의 현재 소속은 어디입니까?   |
|     | ① 공무원    ② 학계    ③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④ 민간기업<br>⑤ 공공기관**    ⑥ 시민사회 단체    ⑦ 지역사회 주민단체<br>⑧ 이외 분야(   )     |
|     | 귀하의 현재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
|     | ① 마을공동체    ② 사회적경제    ③ 도시재생    ④ 지역복지<br>⑤ 환경    ⑥ 여성/성평등    ⑦ 자원봉사    ⑧ NPO<br>⑨ 청년    ⑩ 이외 분야(   ) |

\*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는 법조인, 언론인, 컨설턴트, 협회소속 전문가 등

\*\* 공공기관은 행정조직에 의해 설치된 공공조직을 모두 고려

#### 1. 서울시민사회 시정참여 현황 및 여건

◆ 다음은 서울시민사회의 시정참여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민선 5기부터 현 시점까지 고려해볼 때 일반시민(주민)들의 시정참여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거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다   ② 과거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다
- ③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④ 과거에 비해 다소 적극적이다
- ⑤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다   ⑥ 잘 모르겠다

2. 귀하는 민선 5기 이후 서울시 행정과 시민사회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민사회는 서울시 광역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익 실현을 지향하거나 행정사무에 관여하는 비영리조직(시민사회 단체)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 ① 갈등적 관계가 강하다   ② 갈등이 잠복해있는 긴장관계가 지배적이다
- ③ 대체로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강하다

- ④ 행정이 시민사회를 이용하거나 동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⑤ 시민사회가 행정에 대해 상당히 간섭·개입하고 있다
- ⑥ 대체로 시민사회가 행정을 주도하는 관계라고 본다
- ⑦ 대체로 신뢰와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⑧ 잘 모르겠다
- ⑨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2-1. 귀하가 보시기에 행정은 시민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인식한다고 보십니까)?

- ① 시정(행정)의 적극적 지원자로 본다      ② 협력의 파트너로 본다
- ③ 활용 가능한 대상 주체로 본다      ④ 시혜의 대상으로 본다
- ⑤ 비판과 견제하는 주체로 본다
- ⑥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리려 한다
- ⑦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로 본다
- ⑧ 잘 모르겠다
-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2-2. 그러면, 시민사회는 행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인식한다고 보십니까)?

- ① 시민사회 활동의 적극적 지원자로 본다      ② 협력의 파트너로 본다
- ③ 지도·감독 주체로 본다      ④ 재정지원의 주체로 본다
- ⑤ 비판과 견제하는 주체로 본다      ⑥ 불신이 강하다
-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3. 귀하께서는 서울시(본청)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는 자치구, 근린 단위를 중심으로 공적 사무에 관여하거나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단체, 주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를 뜻합니다.

#### 3-1. 집권적(시정주도) VS 분권적(지역사회주도)

| 집권적<br>(시정주도) |   |   | 보통 |   |   | 분권적<br>(지역사회주도)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   |                 |

#### 3-2. 신뢰(협력적) VS 불신(비협력적)

| 신뢰<br>(협력적) |   |   | 보통 |   |   | 불신<br>(비협력적)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   |              |

4. 귀하가 보시기에 서울시민사회가 시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②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1. (4번의 ①과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서울시민사회가 시정 운영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① 새로운 사회의제의 발굴 및 제안    ②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  
 ③ 정책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    ④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⑤ 행정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⑥ 민주적 시정운영체계 확립  
 ⑦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가치 증대  
 ⑧ 숙의·공론 절차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주민) 참여기회 확대  
 ⑨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2. (4번의 ④과 ⑤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서울시민사회가 시정 운영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① 행정과의 긴장과 갈등 초래    ②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 초래  
 ③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연 초래  
 ④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한 시정의 왜곡  
 ⑤ 행정과 시민 간의 불신 초래  
 ⑥ 불공정한 특혜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저하  
 ⑦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⑧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5. 귀하는 서울시민사회가 시정에 참여·협력하는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위원회제도    ② 민간보조사업(지방보조금제도)    ③ 민간위탁제  
 ④ 숙의·공론화 관련 제도    ⑤ 참여예산제도    ⑥ 시정평가제도  
 ⑦ 주민자치 관련 제도(예, 주민자치회 등)  
 ⑧ 지역사회 기반 협치제도(예,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협치회의 등)  
 ⑨ 자원봉사제도    ⑩ 기부·후원제도  
 ⑪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6. 귀하는 다음 중 다양한 불합리성으로 인해 적극적 개선이 시급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위원회제도    ② 민간보조사업(지방보조금제도)  
 ③ 민간위탁제도    ④ 숙의·공론화 관련 제도  
 ⑤ 참여예산제도    ⑥ 시정평가제도  
 ⑦ 주민자치 관련 제도(예, 주민자치회 등)  
 ⑧ 지역사회 기반 협치제도(예,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협치회의 등)  
 ⑨ 자원봉사제도    ⑩ 기부·후원제도  
 ⑪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7. 귀하가 서울시민사회의 역량(인적/재정/정책/네트워크/문제해결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민사회의 역량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역량이 매우 낮다      ② 역량이 다소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역량이 다소 높은 편이다      ⑤ 역량이 매우 높다

- 인적역량: 조직 내부 인력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우수인력 확보 등
- 재정역량: 조직운영과 가치실현에 필요한 재정의 자립적 조달 및 운용 역량
- 정책역량: 새로운 의제의 발굴이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집행해 성과를 내는 역량
- 네트워크 역량: 다양한 주체나 조직과의 교류·협력의 구축 여부(정도)
- 문제해결 역량: 대내·외 환경변화나 문제에 직면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7-1. 서울시민사회가 가지는 가장 취약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적역량      ② 재정역량      ③ 정책역량  
④ 네트워크 역량      ⑤ 문제해결 역량      ⑥ 취약한 역량 없음

## II. 서울시민사회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 다음은 서울시민사회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가 보시기에 다음 시정(민선 8기)의 서울시민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② 양적으로만 확대될 것이다  
③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이 전개될 것이다  
④ 과거와 다른 혁신적 주체들이 출현·성장할 것이다  
⑤ 시민사회가 시정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할 것이다  
⑥ 시민사회와 행정의 상호 배타(제)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9. 귀하는 향후 서울시(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② 일부 개선되어야 한다  
③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잘 모르겠다

9-1. (9번의 ①과 ②번 응답자만)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개 선택)

- ① 시민사회에 더 많은 행정 및 재정 권한 이양  
② 행정과 시민사회의 신뢰와 동반자 관계의 강화  
③ 행정과 시민사회 간 정책의 공동생산 기회와 노력 확대  
④ 시민사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⑤ 시민사회의 독립성·자율성 존중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⑥ 시민사회 주도의 공문화 및 속의 활성화 지원  
⑦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의 제도적 지원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0. 귀하는 아래의 역할 중 서울시민사회가 수행해야 할 우선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 ② 이해당사자의 이익 대변
- ③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보호·대변
- ④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유도·지원
- ⑤ 주요 시책·사업의 실행과정에 참여(위탁·보조사업 등)
- ⑥ 시책의 공동계획 수립 주체
- ⑦ 공익적·사회적가치 실현 추구
- ⑧ 새로운 사회의제의 발굴·제안
- ⑨ 주요 의제 및 정책의 공론화·숙의 절차(제도)의 선도
- ⑩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1. 서울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된 애로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조직 전체의 미래 불확실이나 불안정성
- ②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 ③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부족
- ④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부족
- ⑤ 단체(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 부족
- ⑥ 다른 단체나 활동가와 교류·협력의 어려움
- ⑦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성
- ⑧ 공공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부족
- ⑨ 행정의 고압적·권위적 인식과 태도
- ⑩ 행정 주체의 불합리한 계약 절차
- ⑪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⑫ 잘 모르겠다

**12. 서울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부족
- ②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부적응
- ③ 일반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저조
- ④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이나 역량 부족
- 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부족 및 신진인력 충원 애로
- ⑥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 부족
- ⑦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부재
- ⑧ 시민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지원시설 부족
- ⑨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호 연계·협력 부족
- ⑩ 시민사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 미흡
- ⑪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3. 귀하는 향후 서울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시민사회주체의 사회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 ② 시민사회단체 설립에 대한 지원 확대
- ③ 시민사회주체들의 역량 강화
- ④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⑤ 후원 및 기부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 ⑥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증진                      ⑦ 시민사회 내부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 ⑧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⑨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공유 공간 및 시설
- ⑩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론장의 활성화 및 다양화
- ⑪ 다른 주체(행정, 기업 등)와의 네트워크 형성
- ⑫ 서울시의 공공사업·시책에의 참여기회 확대
- ⑬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Ⅲ. 주요 정책 및 제도 분야별 진단과 개선방향

◆ 14번~19번은 시정 프로세스 분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4. 귀하가 주로 관여하고 있거나(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① 마을공동체                      ② 주거재생                      ③ 지역사회복지
- ④ 사회적경제                      ⑤ 녹색에너지                      ⑥ 청년지원
- ⑦ 생활안전                      ⑧ 베이비부머 지원                      ⑨ 다문화 지원
- ⑩ 일자리/노동                      ⑪ 생태·환경                      ⑫ 교통
- ⑬ 문화예술/여가                      ⑭ 교육                      ⑮ 여성
- ⑯ 공원/녹지                      ⑰ 건강/의료                      ⑱ 자원봉사
- ⑲ 인권·평등                      ⑳ NGO/NPO지원
- ㉑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4-1. 귀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 추진과정에 주로 어떻게 참여하고(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거의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 ②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단계에서의 참여
- ③ 정책(사업)을 기획(계획)하는 단계에 제한적으로 참여
- ④ 정책(사업)을 기획(계획)하는 단계에 주도적 참여
- ⑤ 정책(사업)의 기획(계획)에 더해 예산편성까지 실질적 참여
- ⑥ 정책(사업)의 기획(계획)과 함께 실행단계의 참여
- ⑦ 정책(사업)의 실행단계에 주로 참여
- ⑧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주로 참여
- ⑨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

15. 귀하가 보시기에 해당 분야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들은 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가지 선택)

- ① 행정의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기획·실행
- ② 민간(또는 시민사회)이 제안한 정책들을 행정이 수용하여 추진

- ③ 행정의 주도하에 기획(계획)한 정책들을 민간이 단순 실행(위탁, 공모 등)
- ④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획(계획)하되 실행은 행정 주도
- ⑤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획(계획)·실행
- ⑥ 민간 주도로 기획·실행하는 정책에 대해 행정이 재정 지원(예, 민간보조 등)
- ⑦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6. 귀하는 민간주체(시민사회단체 포함)의 시정참여가 정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 도움이 안된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⑥ 잘 모르겠다

**17. 그러면, 민간주체의 시정참여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①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수준에서만 참여
- ② 주로 정책(사업)을 기획(계획)하는 단계까지 참여
- ③ 주로 정책(사업)을 기획(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까지 참여
- ④ 정책(사업)의 기획(계획)과 예산편성에 더해 실행과정에도 참여
- ⑤ 주로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만 참여
- ⑥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주로 참여
- ⑦ 정책(사업)의 실행단계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 참여
- ⑧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

**18. 귀하가 보시기에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주체(시민사회 단체 포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 필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3가지 선택)**

- ① 마을공동체      ② 주거재생      ③ 지역사회복지
- ④ 사회적경제      ⑤ 녹색에너지      ⑥ 청년지원
- ⑦ 생활안전      ⑧ 베이비부머 지원      ⑨ 다문화 지원
- ⑩ 일자리/노동      ⑪ 생태·환경      ⑫ 교통
- ⑬ 문화예술/여가      ⑭ 교육      ⑮ 여성
- ⑯ 공원/녹지      ⑰ 건강/의료      ⑱ 자원봉사
- ⑲ 인권·평등      ⑳ NGO/NPO지원
- ㉑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9. 귀하는 민간주체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담당공무원의 열린 마음과 행정문화 촉진
- ② 시민사회 활성화를 선도하는 법률(조례) 제정
- ③ 예산편성 과정의 대외 개방성 확대



22. 귀하가 보시기에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서 개선이 시급한 우선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자원봉사 활동
- ② 자발성이 아닌 의무적 사회봉사 중심의 활동
- ③ 협소한 성격의 봉사활동 영역(예, 복지영역)과 내용(예, 단순노동형 봉사활동)
- ④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부족
- ⑤ 시간 중심의 획일화된 자원봉사 인증체계
- ⑥ 양적성과 중심의 사업 평가
- ⑦ 중간지원조직(자원봉사센터 등)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⑧ 자원봉사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체계 부족
- ⑨ 기타 (※ 구체적으로 술\_\_\_\_\_)

23. 귀하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촉진
- ② 자원봉사 개념과 영역의 확대
- ③ 자원봉사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 ④ 시민(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 ⑤ 자원봉사 관련 다른 분야와의 교류 및 연계 활성화
- ⑥ 중간지원조직(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기구 확대
- ⑦ 자원봉사 활동의 외연 확대와 제도적 기반 조성
- ⑧ 자원봉사 분야 우수인력 발굴 및 육성
- ⑨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_\_\_\_\_)

◆ 24번~26번은 민간보조사업(지방보조금 제도) 분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4. 귀하는 현재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지방보조금 제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1. 전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보조금)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정하다
- ② 다소 적정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 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⑥ 잘 모르겠다

24-2. 민간보조사업 제도의 관리운영체계나 지원절차 등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다소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하다
- ⑤ 매우 부적절하다
- ⑥ 잘 모르겠다

25. 귀하가 보시기에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에서 개선이 시급한 우선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의 불합리성      ② 보조사업 지원규모의 미흡  
 ③ 민간위탁사업과 차별성 부족          ④ 사업참여 주체에 대한 과도한 관리·감독  
 ⑤ 행정주체들의 시혜적 인식과 태도      ⑥ 적절한 사업평가체계의 부족  
 ⑦ 민간주체들의 성과 달성에 대한 책임성 부족  
 ⑧ 보조금 운영에 관한 투명성 부족과 방만한 운용  
 ⑨ 민간보조금의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미비  
 ⑩ 인건비 운용을 위한 제도적 규정 부재    ⑪ 복잡하고 과도한 행정처리  
 ⑫ 단년도 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체계  
 ⑬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6. 귀하는 향후 민간보조사업 제도에서 어떤 방향이 중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대상사업 및 대상주체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②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제도적 틀 확립  
 ③ 참여하는 민간주체의 운영 자율성 및 재량권 강화  
 ④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적정 평가체계의 마련  
 ⑤ 인건비 운영 기준의 합리적 개선  
 ⑥ 사업참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⑦ 사업운영과정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  
 ⑧ 단년도 사업에 기초한 정책추진체계 도입·확대  
 ⑨ 민간보조사업의 별도 중간지원기구 설치·운영  
 ⑩ 민간위탁제도와와의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확립  
 ⑪ 행정처리 및 사업운영 절차의 간소화  
 ⑫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혁신적 민간보조사업 모델 도입  
 ⑬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27번~29번은 민간위탁제도 분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7. 귀하께서는 서울시 민간위탁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②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운영  
 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다소 남발      ④ 위·수탁자 간 갑을관계가 지배적  
 ⑤ 수탁기관의 운영방식(체계)이 전반적으로 비효율  
 ⑥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전반적으로 부적절  
 ⑦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나 정책의 효과나 성과가 다소 저조  
 ⑧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8. 귀하가 보시기에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제도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체계의 불합리성
- ② 수탁자(기관)를 하청조직, 대행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갑을관계
- ③ 수탁자격자 선정과정의 불투명·불공정
- ④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민간위탁 평가체계
- ⑤ 위탁사무 담당 부서의 사업목표와 방향의 불명확
- ⑥ 민간위탁 예산 및 회계 운영을 둘러싼 불합리성
- ⑦ 수탁기관의 경영자율성 부족
- ⑧ 효율과 실적 위주의 사업추진체계
- ⑨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투명성 강화 노력 부족
- ⑩ 수탁기관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미흡
- ⑪ 수탁기관의 부정·비리의 근절
- ⑫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 ⑬ 인력운용에서의 수탁기관의 재량권 부족
- ⑭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 ⑮ 우수인력 운용을 위한 합리적 인건비 기준 결여
- ⑯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_\_\_\_\_)

29. 귀하는 향후 서울시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에서 어떤 방향이 중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사회적가치 기반 사무 확대를 고려한 반영한 민간위탁제 재정립
- ② 민간위탁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 ③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혁신적인 민간위탁제 모델 도입
- ④ 위탁자·수탁자 간 신뢰와 동반자 관계 구축
- ⑤ 불합리한 제도적 절차나 기준(예산이나 인사 관련 규정 등) 재정비
- ⑥ 수탁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 ⑦ 수탁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⑧ 수탁기관의 경영자율성(기획, 예산, 인사 등) 강화
- ⑨ 수탁자격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⑩ 수탁기관의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⑪ 수탁사업 실행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⑫ 수탁기관 운영에 대한 개방성·투명성 강화
- ⑬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_\_\_\_\_)

◆ 30번~32번은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비영리조직 포함)의 책임성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30. 귀하는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의 책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참여하는 사업의 목표 및 성과 달성 책임
- ②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회계처리
- ③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공정한 업무 수행
- ④ 행정과의 계약이나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
- ⑤ 사업추진 시 각종 부정·비리 방지와 처벌
- ⑥ 공익과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사업 이행
- ⑦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 ⑧ 도덕적·윤리적 가치의 지향 및 이행
-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1. 귀하는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주체들의 책임성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책임성이 매우 강하다                      ② 책임성이 다소 강하다                      ③ 보통이다
- ④ 책임성이 다소 약하다                      ⑤ 책임성이 매우 약하다

**32. 귀하가 보시기에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비영리조직의 활동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 ② 사업추진과정에서 회계 및 재정의 투명성 강화
- ③ 부정·비리 등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
- ④ 민간주체 상호 간의 자율적 통제와 관리
- ⑤ 시정 참여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절차나 기회 확대
- ⑥ 제3의 관리·감독기구 설치·운영
- ⑦ 민간의 활동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나 규제장치 마련
- ⑧ 사업추진에 관한 엄정한 모니터링·평가체계 확립
- ⑨ 책임윤리에 관한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적용
- ⑩ 행정과 민간 상호 간에 바람직한 준칙과 제도적 기준 마련
- ⑪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33번~37번은 지역사회 협치 분야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33. 귀하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해 본 사업을 모두 표시)**

| 내용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
| ① 재생(특히 주거재생) 사업                    |       |       |
| ②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       |       |
| ③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           |       |       |
| ④ 지역사회복지 관련 사업(찾아가는 동사무소, 자활, 돌봄 등) |       |       |
| ⑤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보호 관련 사업         |       |       |
| ⑥ 지역사회 내 교육환경 조성 사업                 |       |       |
| ⑦ 지역의 생활안전 관련 사업                    |       |       |
| ⑧ 지역사회 생태·환경관련 사업                   |       |       |
| ⑨ 지역 내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       |       |
| ⑩ 마을에너지 조성 사업                       |       |       |
| ⑪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       |       |
| ⑫ 시민협력플랫폼 운영                        |       |       |
| 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       |
| ⑭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       |

**34.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정(서울시 본청)과 지역사회(자치구, 행정)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는 자치구, 근린 단위를 중심으로 공적 사무에 관여하거나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단체, 주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를 뜻합니다.

- ① 시정이 기획과 실행과정 모두 주도    ② 지역사회가 기획과 실행을 모두 주도  
 ③ 기획은 시정 주도이나 실행은 지역사회 주도  
 ④ 기획은 지역사회 주도이나 실행은 시정 주도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4-1. 그렇다면, 해당 시책(33번 항목)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① 행정(자치구청, 주민센터 등) 주도로 추진  
 ②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추진  
 ③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의 상호 협력하에 추진  
 ④ 자치구 기반 중간지원조직 주도로 추진

- 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추진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5.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된 애로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율성 부족  
 ②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 부족                      ③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량 부족  
 ④ 추진하려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불분명                      ⑤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재  
 ⑥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미비  
 ⑦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및 숙의 절차 부족  
 ⑧ 계획 내 세부사업들의 실행방안 부재                      ⑨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⑩ 사업 규모 및 기간의 부족                      ⑪ 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의 이양  
 ⑫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부족                      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⑭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6. 향후 서울시(본청)와 지역사회(자치구, 행정동)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서울시(본청)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② 서울시(본청)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컨설팅 제공 확대  
 ③ 서울시(본청)와 지역사회 간 신뢰와 동반자 관계의 강화  
 ④ 서울시(본청)와 지역사회 간 정책의 공동생산 노력 확대  
 ⑤ 지역의 자율성 존중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⑥ 지역의 자치와 분권화 노력 강화  
 ⑦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7. 귀하는 향후 지역사회 협치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정책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② 지역사회(주체)의 역량 강화  
 ③ 지역사회로 시정의 권한과 재원의 대폭 이양  
 ④ 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평가  
 ⑤ 지역사회 주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운용  
 ⑥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의 적극적 발굴과 제안  
 ⑦ 지역사회 기반 공론화 절차 활성화와 참여 촉진  
 ⑧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협치제도와 기구 마련  
 ⑨ 행정과 주민 간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 정립  
 ⑩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IV. 서울사회협약에 관한 요구 및 제언

◆ 다음은 '서울사회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협약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정책 협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사회협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 38. 귀하는 서울사회협약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

- |                  |                    |
|------------------|--------------------|
| 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② 제도의 취지 정도는 알고 있다 |
| ③ 들어본 적은 있다      | ④ 전혀 모른다           |

#### 38-1. (38번의 ①, ②,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서울사회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 ⑤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
| ② 상당히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                 |
| ③ 필요하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                 |
| ④ 불필요한 정책이다              |                 |
| ⑥ 잘 모르겠다                 |                 |

### 39. 서울사회협약 추진과 관련해,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                            |
|----------------------------|----------------------------|
| ① 별로 관심이 없다                | ② 참여할 의사는 없으나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 ③ 기회가 주어지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                            |
| ④ 가급적 참여해, 적절한 역할로 기여하고 싶다 |                            |
| ⑤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                            |

### 40. 귀하가 보시기에 서울사회협약을 어떤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                                      |                         |
|--------------------------------------|-------------------------|
| 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협약                     | ⑥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 ② 행정-시민사회 주체 간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협약         |                         |
| ③ 근본적인 정부 혁신(행정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협약       |                         |
| ④ 특정한 사업(예, 미세먼지, 에너지절약 등)을 뒷받침하는 협약 |                         |
| ⑤ 시민사회 내부의 자율협약                      |                         |

#### 40-1. 귀하는 서울사회협약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                               |                 |
|-------------------------------|-----------------|
| ① 행정이 주도하여 추진                 | ②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추진 |
| ③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거쳐 추진 |                 |
| ④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

**41. 귀하는 서울사회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시민사회 내부의 공감대와 자발성                      ② 행정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  
 ③ 시장의 적극적 추진 의지  
 ④ 당사자들이 직면한 현안이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제안  
 ⑤ 참여주체들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절차              ⑥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활성화  
 ⑦ 각 분야별 적절한 대표성 확보              ⑧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회협약 내용 구현  
 ⑨ 협약을 적극 이행하는 추진체계 마련  
 ⑩ 사회협약을 중재·관리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운영  
 ⑪ 협약 불이행에 대한 사후 제재 및 규정 마련  
 ⑫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2. 귀하는 서울사회협약 추진 시, 핵심 정책방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협약의 취지를 실현하는 적정 협약 의제의 선정  
 ②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 유도·촉진  
 ③ 사회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약이행체계  
 ④ 사회협약 정책의 지속적인 외연 확대(분야, 주체 등)  
 ⑤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⑥ 협약 이행에 관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확립  
 ⑦ 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우수 시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⑧ 사회협약 확산을 위해 자치구 기반의 2단계 사회협약체계 추진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3. 귀하가 서울사회협약 체결에 필요한 협약서를 직접 작성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2가지 선택)**

- ① 참여주체들이 실현하려는 공동의 목표와 실천과제  
 ② 협약 실행에 관한 행정과 시민사회 역할과 책임  
 ③ 시민사회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주체들의 노력  
 ④ 협약을 통해 실현하려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적절한 관계  
 ⑤ 협약을 이행을 위한 시장(mayor)의 책무  
 ⑥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⑦ 협약 이행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  
 ⑧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4. 서울사회협약을 통해 행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모색한다면, 귀하는 어떠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3가지 선택)**

- ① 위원회제도    ② 민간보조사업(지방보조금제도)  
 ③ 민간위탁제도                                        ④ 숙의·공론화 관련 제도  
 ⑤ 참여예산제도                                        ⑥ 시정평가제도  
 ⑦ 주민자치 관련 제도(예, 주민자치회 등)

- ⑧ 지역사회 기반 협치제도(예,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협치회의 등)  
 ⑨ 자원봉사제도 ⑩ 기부·후원제도  
 ⑪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5. 귀하는 서울사회협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협약 추진의 제도적 절차 마련 ② 협약의 이행계획 및 지원체계 구체화  
 ③ 이행과정의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④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⑤ 이행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⑥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조직 신설  
 ⑦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조직화  
 ⑧ 협약 이행 여부의 시정평가에 반영  
 ⑨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6. 서울사회협약과 관련하여 고려 또는 반영해야 한다고 보시는 의견이 있으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